

W:WOOSUNG

2023년 9월

# 주간 축산 이슈 뉴스클리핑

9월 3주차 HOT ISSUE

- 전국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 “ASF 남하 막아라” 총력 대응

**붙임** 하반기 전국 소·염소 구제역백신 일제 접종 개요**추진 배경**

-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17.9월부터 특정 시기(4월, 10월)를 정하여 매년 전국 소·염소를 대상으로 일제 접종 실시

**접종 대상**

- 전국의 소·염소 108천 농가, 4,564천 마리
  - (소) 96천 농가 4,096천 마리, (염소) 12천 농가 468천 마리
  - 접종 제외대상
    - ①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 ② 출하 예정일 2주 이내인 가축
    - ③ 임신말기(7개월~분만일)로 농가에서 일제 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

**접종 내용**

- (접종 기간) 2023. 10. 4. ~ 10. 18.(2주간)
  - \* 단, 공수의가 백신접종을 지원하는 농장은 4주간(10. 4. ~ 10. 31.) 접종
- (접종 백신)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2가 상시 백신(O+A형)
- (접종 방법) 소규모 농가(소 50두, 염소 300두 미만)는 공수의사가 직접 접종(100% 지원), 전업규모 농가(소 50두, 염소 300두 이상)는 자가 접종
- (백신 공급) 축종별·사육규모별로 백신을 차등 지원
  - (소 소규모·염소) 시군별로 일괄 구매, 농가에 공급(보조 100%)
  - (소 전업) 농가가 직접 축협동물병원에서 구매(보조 50%, 자부담 50%)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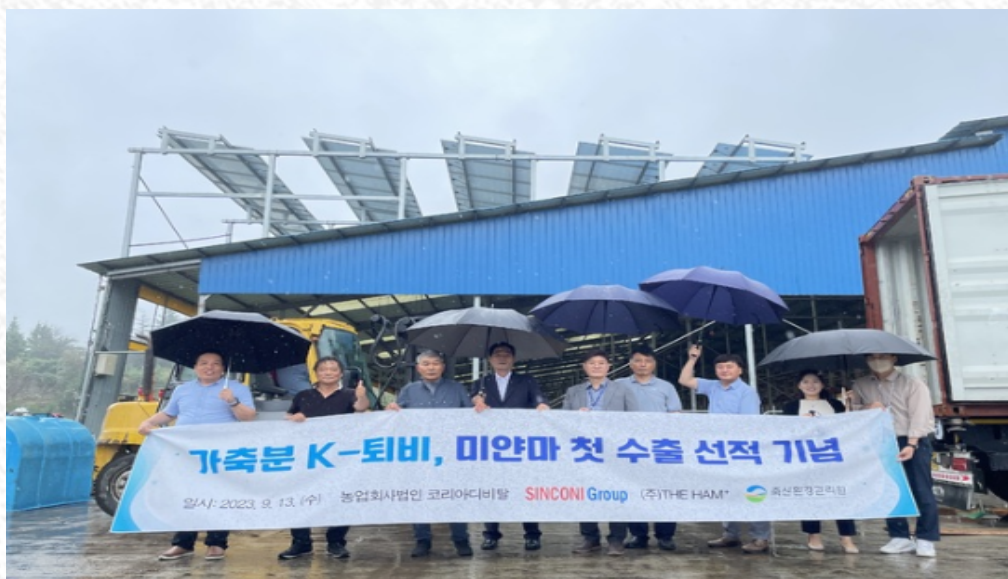
- 일제 접종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접종 4주 이내 모니터링 검사 실시
  - 검사 결과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소 80%, 염소 60%) 미만인 농가는 과태료 부과 및 재접종하고, 4주 이내 재검사 실시
-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일제 접종 시 접종이 누락되었거나 유예된 개체를 확인하여 추가 접종 등 지속 관리

## 전국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내달 4일부터 2주간

올해 하반기 구제역백신  
일제 접종 추진  
10월4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전국 소·염소 구제역백신 접종

이번 일제접종은 소·염소 456만여마리가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6주에 걸쳐 일제 접종이 이뤄졌다. 하지만 올해 구제역이 발생한 일부 농가에서 항체양성률이 기준치보다 낮았던 점을 고려해 예방효과를 높이하고자 단기간(2주)에 일제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게 방역당국의 목표다. 다만 소규모 농가(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미만)는 시군별 공수의사 등 인력 동원 상황을 고려해 10월31일(4주)까지 일제 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접종 완료 4주 뒤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는 농가가 백신접종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고자 무작위로 농가를 선정해 소·염소의 백신 항체양성률을 확인할 예정이다. 항체양성률 기준 미만 농가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농가는 백신을 재접종해야 하며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4주 간격 검사가 실시된다.





## 국내 생산 우분 퇴비 미얀마로 첫 수출

13일 홍성 예금농장서 가축분  
퇴비 미얀마 수출 선적기념식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13일 충남 홍성에 있는 한우농장인 예금농장(대표 이예순)에서 생산한 가축분 퇴비 20t을 미얀마에 처음으로 수출한 것을 기념하는 선적 행사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미얀마 수출은 예금농장이 우분 퇴비를 제조하고 (주)더함(대표 추광석)이 수출판로를 마련함으로써 성사됐다. 더함은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 퇴비)를 미얀마에서 판매하는 신코니그룹(SINCONI Group)의 한국 에이전트다.

예금농장의 우분 퇴비는 미생물제(바실러스 서브틸리스 등) 이용과 건조기술로 제조됐으며, 미얀마에서 요구하는 퇴비 품질을 충족했다. 기존에는 가축분 퇴비를 입상, 펠릿 등의 형태로 수출해왔다. 예금농장에서는 분상으로 제조·수출함으로써 제조상의 추가 공정 비용을 감축할 수 있었다는 게 관리원의 설명이다. 관리원은 가축분 퇴비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축분뇨 처리 컨설팅과 시험분석 지원으로 품질관리를 하는 등 품질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기적인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수출국인 동남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재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문 교육 자료를 함께 제공해 국내 가축분 퇴비의 수출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예순 대표는 “앞으로도 축분처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에 대한 고민이 있는 관내 농장과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문홍길 원장은 “이번 수출은 축분처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원활한 가축분 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 가축분 퇴비의 첫 미얀마 시장 진출인 만큼 퇴비의 품질과 사용 편의성 제고에 힘써 해외시장 입지를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 호우 피해 축산농가 지원 늘렸다

입식비 100% 보조...특별 위로금도  
한시적 확대...기존 대비 3배 올려



최근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가축 입식비가 전액 지원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에 한시적으로 적용할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가축 폐사로 새로 입식하는 경우 50%만 보조하던 것을 이번 호우 피해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키로 했다. 이번 집중 호우에 97만여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는데 돼지도 3천800여마리 폐사했다. 또한 그동안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축산 시설 피해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것을 농축산시설 내 생산 설비와 농기계까지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농기계나 생산설비의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농어업 시설 복구지원 보조율과 동일한 35%를 적용해 지원하며 최대 5천만원까지다. 지원 규모는 4천 300여 피해 농가에 농가당 평균 455만원이 추가 지원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피해가 큰 농가는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어린 가축이 클 때까지 소득 공백이 채워질 수 있도록 피해 작물의 영농형태와 규모별로 최대 520만원(2인 가족 기준)의 특별 위로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 밖에 작물에 대해서도 다시 심어야 하는 경우 대파대, 종자대, 묘목대의 보조율을 종전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정황근 농축산부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작물 피해가 크거나 가축이 폐사한 경우 대파대, 입식비와 특별위로금을 포함하면 기존 지원금 대비 약 세배 인상된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휴가철 수입육 한돈 둔갑 활개

돈육 원산지 위반 압도적 1위  
수입량 더 많은 소보다 더 빈번



돼지고기 수입량이 줄어도 휴가철 원산지 둔갑은 여전히 활개를 친 것으로 나타났다. 가뜰이나 위축된 휴가철 한돈소비를 수입육이 가로챈 셈이다.

최근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33일간 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209개소(237건)를 적발했다. 휴가철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축산물에 대한 중점 관리 차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역시 돼지고기가 위반 건수가 타 축종 대비 압도적으로 많았다.

돼지고기의 원산지 위반 건수는 134건으로 쇠고기(57건), 닭고기(31건)와 차이가 컸다. 올해 돼지고기 수입량은 줄었지만 원산지 위반 단골 품목의 자리는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수입량으로만 따지면 돼지고기(7월말 25만8천톤)가 쇠고기(27만6천톤)보다 적었지만 원산지 위반 건수로는 월등히 많았다.

업종별로는 일반 음식점(154개)이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업(23개소), 가공제조업(7개소) 순이었다. 농관원은 돼지고기의 경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하고 부정 유통 우려가 있는 정보를 사전 수집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 양돈장 바이오가스 의무 “절대 안 돼”

환경부, 2만두서  
2만5천두로 변경  
한돈협, 바이오 생산 의무  
제외를 규제심사위원회에  
반대 의견 제출키로



환경부가 양돈의 경우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 규모 대상을 기존 2만두서 2만5천두로 완화했다. 그러나 한돈협회는 축산농가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자체를 폐기할 것을 재차 촉구키로 했다. 환경부는 최근 축산농가를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로 지정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 가스 촉진법) 시행령, 시행 규칙을 지난 4월 입법예고 했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는 돼지 2만두 이상 농가에 대해 내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에 한돈협회 등 축산단체들은 2만두 규모의 농가라 할지라도 1개소당 100억원이 넘는 바이오가스 시설을 설치할 실질적 여력이 없다고 반발하며, 축산의 경우 바이오가스 촉진 의무화서 제외 의견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22일 민간 의무 생산자 규모를 기존 돼지 2만두에서 2만5천두로, 가축분뇨 100톤 이상 처리 사업장서 200톤 이상 처리 사업장으로 완화한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돈협회는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 생산자에 일정 규모 이상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원활한 축분처리를 저해하고 결국 농가의 분뇨처리 비용만 상향시키는 악순환의 결과를 불러올 뿐이라고 재차 성토했으며,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 반대를 포함한 의견을 규제심사위원회에 제출해 부당한 법안 철회를 촉구키로 했다.



## “ASF 남하 막아라” 총력 대응

5단계 광역울타리 이남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연이어 검출  
영덕·청송서 발생...집중 포획  
정부, 울타리 관리 강화하고  
차단방역 등 대책 시행 예정  
합동점검반 꾸려 농가 살펴



경북 상주와 영덕에 이르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5단계 광역울타리 이남지역의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 정부가 야생멧돼지 집중 포획 등 확산 차단 대책 마련에 나섰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상주에서 영덕에 이르는 5단계 광역울타리 이남의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지속 발생해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가 참여하는 긴급상황점 검회의를 6일 개최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ASF 바이러스가 지속 남하해 8월 말부터 경북 영덕 광역울타리 이남지역에서 5건의 야생멧돼지 ASF 확진이 있었고, 이달 4일에는 처음으로 경북 청송에서 야생멧돼지 2마리가 ASF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환경부는 열화상 드론과 연계한 포획단을 이용해 청송지역의 야생멧돼지를 집중 포획한다는 방침이다. 또 ASF 오염원의 신속한 제거를 위해 수색반 30명과 탐지견 6마리를 투입해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집중 수거한다.



## 농장 달걀 살충제 집중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말까지 실시한 산란계 농가의 달걀에 대한 살충제 집중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정부는 2017년 살충제 달걀 사건 이후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매년 전체 산란계 농가의 달걀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달걀 살충제 집중검사는 닭진드기가 많아지는 여름철(5월 말~8월 말)에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체 산란계 농장 1303호 중 달걀을 생산하고 있는 농가 1117호(85.7%)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다.

검사항목은 피프로닐, 비펜트린 등 살충 성분 34종으로 2017년 검사 결과 78호 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2021년부터 올해까지는 모든 농가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부터 11월까지 유통단계 달걀 검사를 시행하며 농식품부는 하반기 입식 등으로 달걀을 추가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12월까지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달걀 검사와 함께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진드기 방제 약품 안전 사용기준을 지도·홍보하고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전담자 지정·관리 등을 통해 달걀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안전한 달걀공급을 위해 앞으로도 축산농가는 농장·장비 및 기구 등에 대한 청소·세척·소독을 철저히 하고, 방제용으로 허가된 동물약품을 사용 설명서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